

호남, 소재·부품산업 비중 1.9% '국산화' 지원 받을 기업이 없다

광주 39·전남 17·전북 34곳
일 수출규제 대응 전폭 지원 속
호남은 기업 없어 '그림의 떡'
영남권 2324곳 ... 절반 차지

한·일 경제전쟁이 격화하면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기조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로 정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대기업 중심의 완제품 생산 방식에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책 방향과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광주·전남 지역은 정부 정책 지원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보니 정책 지원을 받을 중소기업이 없다는 불만소리가 나온다. <관련기사 8면>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중점집보망에 따르면 이날 현재 소재·부품 분야 정부 인증을 받은 전문기업은 전국적으로 4699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지역이 전체 29.5%인 138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 17.2%(808), 경남 12.2%(572), 경북 12.0%(564), 인천 10.3%(483), 부산 6.8%(318) 순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39·17곳으로 전체 비중이 0.8%와 0.4%에 불과했다. 전북도 34곳, 0.7%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2324곳으로 전체의 절반인 49.5%를 차지했고, 수도권은 1956곳으로 41.6%였다. 영남권과 수도권을 합하면 91.1%로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정부인증 소재·부품기업 지자체별 현황 <단위:%, 개>

경기	29.5%(1386)
대구	17.2%(808)
경남	12.2%(572)
경북	12.0%(564)
인천	10.3%(483)
부산	6.8%(318)
충북	2.9%(138)
충남	2.7%(127)
서울	1.8%(85)
울산	1.3%(62)
대전	0.9%(44)
광주	0.8%(39)
전북	0.7%(34)
전남	0.4%(17)
세종	0.3%(13)
강원	0.2%(9)

이 곳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권은 6.9%였으며, 호남권은 1.9%로, 제2에도 미치지 못했다.

산업부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총 매출액 가운데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전문기업으로 확정되면 3년간 지위를 인정받는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에게는 은 인력(병역지정업체)·금융·기술개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지역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지난달 30일 새로 인증을 받은 ㈜이노글로벌·삼성스텐레스상공(주) 등 39곳이다. 북구 첨단산

단에 22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광산구 하남산단·평동산단 등에 17곳이 있다.

업종별로는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과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전자 부품·장비 각각 6곳, 주형 및 금형 제조업과 자동차부품제조업이 각각 4곳으로 광주시 주력 산업인 자동차·가전·광산업 분야가 3분의 2를 차지했다.

전남지역 소재·부품 산업은 광주보다 더 취약했다. 이는 전남의 산업구조가 동부권 중심의 석유화학·철강 등 장치산업에 쏠려 있는 데다, 울산·포항의 산업구조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는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의 지역별 전문기업 분포를 보면 여수·순천·광양지역이 각각 1곳에 그친데 반해 조선업 중심의 대불산단이 있는 영암은 5곳, 영광이 2곳이었다. 광주 인근 담양 2곳, 장성·나주가 각각 1곳이었다. 이들 지역은 광주 대표 산업과 연계된 중소기업으로 보인다.

전문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소재·부품 관련 기업 2만5869곳 가운데 광주는 610곳(1%), 전남은 465곳(0.4%)에 그쳤다.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정부의 관련 산업 집중 육성 방침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은 외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지역 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황 등 실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등 23개 기관으로 구성된 광주·전남중소기업지원정책협의회는 19일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업체들에 대한 정보공유가 시급하다"며 관련 기업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영광 종돈장, 돼지열병 음성 판정에 '안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경기 연천 양돈장에 새끼돼지를 공급했던 영광지역 종돈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전남도는 일단 한숨 돌리는 모습이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연천 ASF 확진 양돈 농가에 대한 정

밀 검사를 벌인 결과, '이상 없다'는 '음성' 판정을 내렸다. 해당 양돈장에서는 지난 2일 연천 ASF 확진 양돈 농가를 찾아 새끼 돼지 20마리 분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러나 ASF 바이러스 잠복기가 이동일로부터 최장 21일에 달하는 만큼 오는 23일까지 해당 종돈장에

대한 임상 관찰을 계속하기로 했다. 비슷한 시기 연천 농장을 방문했던 양돈 컨설팅 차량도 해당 종돈장 인근을 지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병 이후 전국에 내려진 돼지 이동중지명령도 48시간 만인 이날 오전 6시 30분에 해제되면서 지역 돼지 사육농가를 비롯한 가공업체, 도축업체 등도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국제아트페어 DJ센터서 개막 제10회 광주국제아트페어(아트:광주)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오는 22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13개국 91개 갤러리 부스와 79개 작가 부스가 운영되며 총 6000여점의 작품이 관람객을 맞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민사회 반대에도 박광태 대표 '고수' 광주시, 글로벌모터스 오늘 등기 신청

노동계 "사업 순탄치 않을 것"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 설립(등기)이 늦어도 오는 23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주시가 시민사회로부터 비리전력에 비전문가라는 지적을 받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대표 이사로, 노동계로부터 노조 적대시 인물로 지목받은 현대자동차 출신 박광식 전 부사장 등 3인을 법인 등기이사로 등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겨뒀다. <관련기사 3면>

여기에 2대 주주이자 차량 모델 개발, 빛그린산단 자동차공장 건립, 차량 판매 등을 맡을 현대차 측이 노사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당초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사업 관련 요구를 쏟아내며 판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향후 사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노동계에 팽배하다.

광주시는 19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대표 25명으로 구성된 제3차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애초 전날 오후

열리기로 한 협의회는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노동계 관계자 3명이 불참해 이날로 연기됐다. 이날 협의회도 노동계 인사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으나 윤 의장 등의 막판 참여로 정상 진행됐다.

이와 관련 지역노동계 인사는 "이번 노사민정협의회 최초 안건의 경우 현대차 측이 말 그대로 '노사상생형 일자리'라는 애초 사업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요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돼 있어 노동계가 보이콧한 것"이라며 "막판에 현대차 측이 뜻을 접으면서 윤 의장이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날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은 합작법인 조기 안정화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1월 말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투자협약에 따라 법인을 운영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진 선임, 노동이사제 등 투자협약의 범위를 벗어난 사안으로 법인의 안정화와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다. 또 법인이 조속히 안정화하도록 법인 설립의 마감 시한인 23일까지 설립 절차를 완료해달라고 주주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주주간 협약에는 '정해진 기간(오는 23일)까지 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주주와의 투자 협약을 무산되고, 투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광주 라마다 호텔에서 법인 주주들과 만나 결의사항을 설명했다. 20일 법원에 법인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을 끝으로 설립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설립사업은 합작법인이 노사상생 정신을 유지하며,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하는 내용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광역시 공고 제2019-1667호

『광주광역시 무인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등의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및 공청회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6일
광주광역시

- 1 열람기간**
2019. 9. 12.(목) ~ 2019. 10. 7.(월) (09:00 ~ 18:0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공고기간 : 2019. 9. 6.(금) ~ 2019. 10. 7.(월)
- 2 열람장소**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 (062-613-3943)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8층
- 3 특구계획(안) 열람장소 비치**
- 4 특구개요**
 - 규제자유특구 명칭
- 국문명 :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 영문명 : Gwangju Regulation Free Special Zone for Unmanned low-speed special vehicle
 - 사업목적 : 자율주행 기반의 무인저속 특장차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및 광주 자동차 산업의 혁신성장 도모
 - 특구기간 : 2020 ~ 2023(4년)
 - 규제자유특구 위치 및 면적 : 첨단·평동산단, 우치공원 등 일원 4.99㎢
-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 :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에 적용되는 사업 신청 민간사업자의 사업장, 실증 허가 도로 및 장소
 - 세부사업특구 계획(안) 참조
- 5 의견제출 및 사업자 신청**
 - 열람 및 의견제출처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8층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 (062-613-3943)
- 이메일 : oksoon1016@korea.kr
 - 열람 및 의견제출 기한
2019. 9. 12.(목) ~ 2019. 10. 7.(월)
- 6 공청회 개최(예정)공고**
 - 공청회 개최목적 : 광주광역시 무인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민간기업,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공청회 개최일시 : 2019. 10. 1.(화) 15:00 ~ 17:00
 - 공청회 개최장소 : (재)광주그린카진흥원 1층 대강당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 중앙로55
 - 특구계획(안) 개요 : 기재 생략(공청회시 배부)
※ 공청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062-613-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서식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참조 (www.gwangju.go.kr)